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vol.77

국민권익위원회

ACRC NEWSLETTER 2023
Vol. 77
SUMME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국민권익

어려운 고충
완벽한 해결로 스마일 !

ACRC NEWSLETTER 2023
Vol. 77
SUMMER

CONTENTS

발행일 2023년 8월 18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김홍일
편집인 임규홍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www.acrc.go.kr
blog.naver.com/loveacrc
twiter.com/loveacrc
www.facebook/loveacrc
www.instagram.com/acrc0229

유익한 권익

04 권익 현장
-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취임
- 관광특구 진해 '여좌천' 소음·악취 해소

08 정책 공작소
202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 톺아보기

14 빅데이터 窓
2023년 6월 국민의 목소리

18 권익 키워드
7월의 관심키워드: 아파트 부실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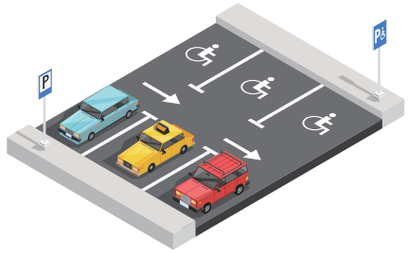
20 친절한 권익
미리보는 2023 추석 명절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2 ACRC 뉴스
지난해 하반기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외

생활속 권익

26 고충 해결소
국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다

30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및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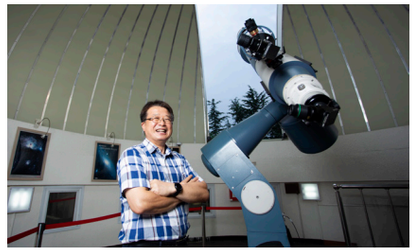


32 권익비전
Hot 영상 추천3

34 카툰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공감의 권익

36 사람과 공감
별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있는 대전시민천문대 최형빈 대장



40 찰나의 순간
한여름밤의 여수

46 휴먼+트렌드
'제로' 열풍, 먹거리 시장을 뒤흔들다

50 찾아가는 권익
환경을 위한 지구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52 이야기가 있는 레시피
무더운 여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 여름 불청객 요로결석

56 독자의 소리
퀴즈 당첨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일류국가 건설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취임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7월 3일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10년 만에 공직에 복귀해 설렌다고 입을 뗀 그는 취임사에서 "권익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일 잘하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민 신뢰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며, 권익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건네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오늘날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부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 권익위에 맡겨진 본연의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나 심판청구인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불편과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2016년 OECD보고서가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자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부패를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자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견인해야 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사를 마쳤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국민의 불편과 정책개선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약력

2023.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3.5~2023.6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2011.8~2013.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8~2011.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1985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관광특구 진해 '여좌천' 소음·악취 해소

별도 배출구 신설 및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는 인근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에서 사용하고 배출하는 많은 양의 배출수로 인해 2019년부터 낙수 소음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좌동 주민들과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낙수 소음과 악취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벚꽃길로 유명한 진해 여좌천의 낙수 소음과 악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6일 여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좌동 주민들과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낙수 소음과 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 인접한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는 보다 쉽고 편하게 양식생물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물을 여좌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배출수로 인한 낙수 소음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수산과학원, 창원시는 낙수 소음 해소를 위해 배출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수차례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별도의 배출구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창원시는 이렇게 신설될 배출구를 여좌천과 지하로 연결하고 하천에 맞닿은 최종 출구를 하천 바닥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악취 해소 방안으로,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창원시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검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벚꽃으로 전 국민의 부러움을 받는 창원시에 남모를 고충이 수년간 계속돼왔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민원들을 찾아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 톺아보기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자.

I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이해충동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신을 넘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국회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다음해 5월 19일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 관리, 통제장치를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했으나 행정부에만 적용되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상향법제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 수준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한 마디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그 대상으로, 주요 내용은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 **제5조제1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제6조제1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1)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공직자

  2) 제1항의 기관 외에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해당 공직자는 보유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 **제8조제1항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9조제1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예외: 민법제777조의 친족과의 거래(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15조제1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 **제10조제1항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7. 가족 채용 제한

- **제11조제1항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신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지시·유도·묵인 금지).

-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산하기관 입장),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자회사 입장)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2)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 제3자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2항).

Ⅲ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앞에서 살펴본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Q1 ○○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맡아 추진 중입니다. ○○공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A는 동료를 통해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우자 B에게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게 했습니다. 공직자 A는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A1 우선, 역세권개발 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개발 정보가 미공개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A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청은 업무 특성상 대체로 해당 물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A2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단서에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우선 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인지 확인하고, 다음 절차로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Ⅳ 이해충돌방지법,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법 시행의 효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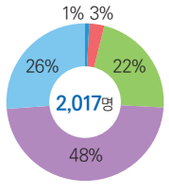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17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국민신문고가 협조해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별도 진행한 결과 총 2,397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온나라시스템 혁신게시판에 공개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들의 법령 준수 정도, 기타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해 향후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시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73.6%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약 46.8%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62.0%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향후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도 운영 내실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강화 등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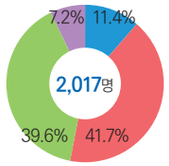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전혀 모른다	13명
잘 모른다	64명
들어본 적이 있다	454명
알고 있다	961명
잘 알고 있다	5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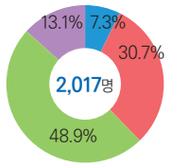
공직자의 법 준수 인식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230명
준수하지 않는 편이다	842명
준수하는 편이다	799명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1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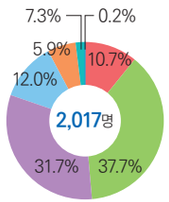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성

전혀 효과가 없다	147명
별로 효과가 없다	619명
효과가 있는 편이다	936명
매우 효과가 있다	265명



연령

10대 이하(~19세)	4명
20대(20세~29세)	216명
30대(30세~39세)	760명
40대(40세~49세)	640명
50대(50세~59세)	243명
60대(60세~69세)	120명
70대 이상(70세~)	34명



빅데이터로 확인하는 2023년 6월 국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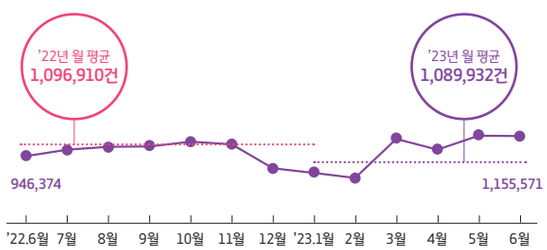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bigdata/bigMainPage.npaid)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기관별, 성별, 연령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의 민원 빅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권익위원회가 분석한 각종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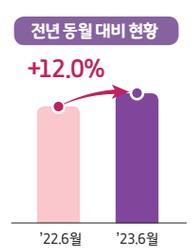
2023년 6월에는 국민권익위, 충청북도, 경북 울릉군, 인천교육청, 금융감독원 등이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했다.

1 민원 추이

- 2023년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87,183건**
- **전월**(1,186,291건) 대비 **0.1% 증가,**
- **전년 동월**(1,059,706건) 대비 **12.0%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 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7.3.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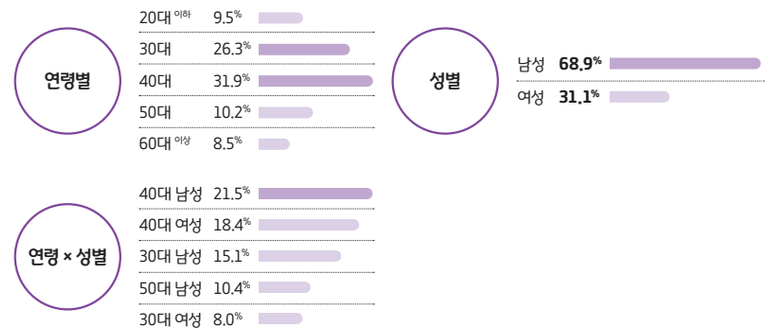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9%) 및 **30대**(26.3%), 성별로는 **남성**(69.6%)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5%), **30대 남성**(19.3%), **50대 남성**(14.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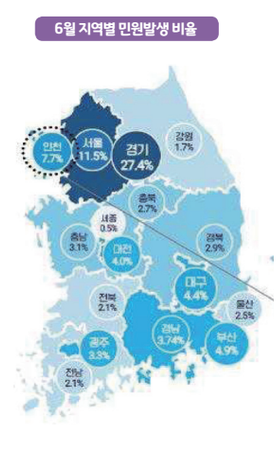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36,853건 대상



3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가 27.4%**(293,34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5%(**(136,645건), **인천 7.7%**(91,546건), 부산 4.9%(57,565건), 대구 4.4%(52,584건) 등의 순 부산 6.1%(58,530건), 광주 5.9%(57,377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2.1% 차지
- 특히 제2경인선 대안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23년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 **인천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3.0%↑)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민원(제2경인선 대안노선 관련)이 가장 많았다(36,947건).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87,183건 대상



4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58.0%)**가 가장 많고, 도로(7.4%), 행정안전(6.4%), 환경(4.7%), 주택건축(2.5%), 산업통상(2.2%), 보건(1.9%)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보건	경찰·검찰·법원	
58.00%	7.40%	6.40%	4.70%	2.50%	2.20%	1.90%	1.90%	
교육	수자원	문화	재정	방송통신	농림축산	노동	국방	
1.40%	1.40%	1.30%	0.80%	0.80%	0.80%	0.70%	0.60%	
도시	복지	체육	관광	과학기술	세무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60%	0.50%	0.50%	0.50%	0.50%	0.40%	0.30%	0.30%	0.20%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45,729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재정 25.1% ▲	보건 15.8% ▲	환경 8.6% ▲	수자원 6.3% ▲	방송통신 4.6% ▲
감소순	국방 29.4% ▼	도시 25.6% ▼	세무 21.0% ▼	노동 16.6% ▼	과학기술 13.9% ▼

5 주요 민원키워드

6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서창동 갯골 물 공급 요구, 제2경인선 추진, 위례호수공원 시설 운영 요청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처분 등 교통법규 위반신고 등은 '불법주정차 등' 키워드에 포함

일반

1. 인천광역시 서창동에 갯골수로가 있지만 만조 때가 아니면 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갯골 수로에 물 공급 요청
4. 위례호수공원의 화장실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공사 중인 시설의 운영 요구
7. 통학로 안전(통학로가 좁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음)에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인근 다른 학교로의 배정 요구
10.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도로교통

2.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재기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빠른 추진 요청
5. GTX-C 노선이 병점역 정차 없이 병점차량기지로만의 사용 반대

순위	키워드
1	**서창동 갯골 물 공급 요구**
2	러브버그 방역요청
3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4	**위례호수공원 시설재개**
5	영통소각장 폐쇄
6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7	**북수원 ○○초등학교 재배정**
8	불법 광고물 제거 요청
9	대구 서구 전신주 지중화
10	**검단 붕괴 아파트 재시공**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등
2	**제2경인선 추진**
3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변경
4	제2경인선 부천 경유
5	**GTX-C 병점역 정차**
6	어린이 보호구역
7	경기도 구리시 GTX 갈매역
8	경의중앙선 향동역
9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10	신호위반 차선 변경

6 지방자치단체

6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85,481건**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인천, 충남, 세종 등 6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서울, 대전 등 11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지역명	'23.5월	'23.6월	증감률
서울	58,735	57,188	-2.6%
인천	2,418	7,497	**210.1%**
대전	5,703	5,287	-7.3%
세종	3,826	3,939	3.00%
경기	3,216	3,254	1.2%
부산	1,977	1,697	-14.2%
대구	2,242	1,490	-33.5%
광주	1,784	1,383	-22.5%
울산	969	1,018	5.1%
충남	451	483	7.1%
충북	363	342	-5.8%
제주	383	334	-12.8%
전남	393	333	-15.3%
강원	375	331	-11.7%
경남	340	326	-4.1%
전북	302	272	-9.9%
경북	633	267	**-57.8%**

7월의 관심키워드: 아파트 부실시공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지구의 한 아파트 붕괴, 지난 4월 인천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5월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대폭 증가하며 강력한 행정처벌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 민원 추이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총 418,535건('20.6월~'23.5월)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으로 2023년 5월 민원이 대폭 증가했다.

2 신청인·신청지역

› 신청인은 남성(67.7%)이 여성(32.3%)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5.1%), 40대(30.9%), 60대(11.7%), 50대(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293,680건,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76,742건 대상

› 신청지역은 경기 수원시(24.7%),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청지별 정보 확인 가능 430,108건(전체의 9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경기도 수원시(25.1%), 한국토지주택공사(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개선 요청사항

› 최근 준공을 앞둔 신축아파트들에서 부실 공사 징후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②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③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타지역 건설현장 및 완공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④ 명확한 사고원인 진상규명

5 민원 사례

미시공 상태로 사전점검 진행

•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22년 12월)

• 2021년 청약이 당첨되어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뿐만 아닌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시에 문의하였으나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22년 12월)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후 준공 승인

• 사전점검 당시 공용부는 말 그대로 공사장 수준이었으며, 내부 역시 시공되지 않았거나 수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세대 내부에서 75개의 하자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다른 세대들 역시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이르는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시공사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자가 접수된 건들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반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 1월)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23년 5월, 서울시 강서구)

사고가 난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도 안전점검 요청

•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비록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 아파트도 정밀진단 목록에 포함해 점검을 요청합니다.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주해야 할 곳이 부실시공은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23년 6월)

미리보는 2023 추석 명절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OMR 퀴즈

각 번호 OX OMR을 체크해서「국민권익」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OX OMR 퀴즈로 권익 정보도 알고 상품도 얻어가세요.

#1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O	( )
X	( )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Q.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O	( )
X	( )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3

Q.
친지 중에
공직자가 있다면,
명절 선물은 가능한가요?

O	( )
X	( )

A.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4

Q.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O	( )
X	( )

A. 직무과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요?

O	( )
X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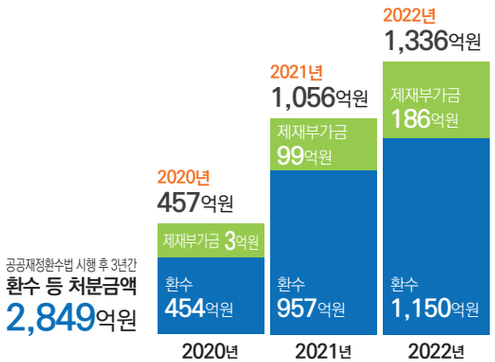
A. 네. 농수산물을 선물할 때는 농산물, 수산물은 물론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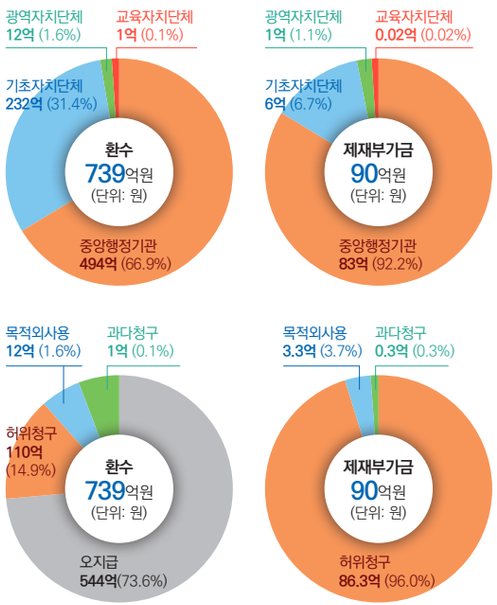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린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타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해 청렴포털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신고 현저히 감소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이었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대부분은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신고사건 사례,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세계에 소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89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유엔반부패협약 회의가 열렸다. 유엔반부패협약은 민주주의·윤리적 가치 정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해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린 회의에서는 협약 당사국,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들이 그간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행점검 절차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 14차 이행점검회의 및 제14차 부패예방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평가체계를 통합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과 이에 따라 실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제8회 예비 법조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4~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6월 3일부터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예선은 6월 21일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7월 16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했다. 본선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7층 심판정에서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의 장관급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한 8개팀 모두에게 소정의 상금이 부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비전」 10만 명 돌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이 지난 10일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권익비전」은 지난 4년여간 국민의 권익보호와 청렴사회를 위한 각종 노력을 '즐거운 정책, 유익한 콘텐츠'로 녹여냈으며,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권익비전」은 고충 민원 해결사례와 권익위원회의 각종 활약상을 소개하는 <권익위가 간다>, <떴다 권익위>, <권익it슈다> 등과 같은 정책 콘텐츠와 함께 <정책홈쇼핑 누리쇼>, <위클리 권익>, <권익투토커>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들로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권익위의 법과 제도를 가수 규현과 배우 이상엽이라는 홍보대사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소개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이용,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행정심판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로 자리 잡았다.

취임 당시 구독자 수가 5천여 명에 불과했던 「권익비전」을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모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권익비전 구독자 10만 달성이라는 소통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남기고 앞으로도 "'든든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보건복지분야	산업자원분야	고용노동분야	여성가족분야	교육분야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해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접수해주세요.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 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	포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국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이 마주한 고충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임대주택 하자 보수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취소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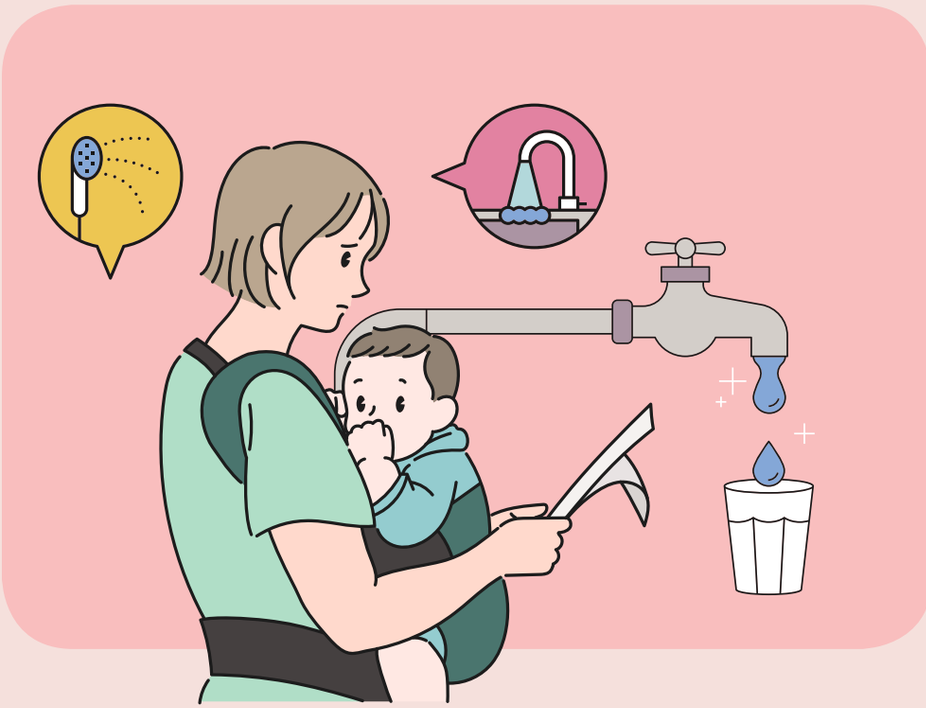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인 2017년 거실 창문틀과 도배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고,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인 2018년에 입주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대주택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신청인은 입주 지연의 원인인 하자는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이기에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말즈음 거실 창문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으나 도배는 보수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같은 해 동안 여덟 차례 하자 보수를 다시 요청한 끝에 피신청인은 2018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하자를 처음 접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 관리비, 통신요금 및 입주청소 등과 관련된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의 보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홈케어(입주청소 업체) 대표 C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임대주택 임대료를 납부한 대금납부확인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의 유무를 판단했다. 첫째, 신청인이 2018년 하자의 보수가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에 입주한 점. 둘째,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시점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셋째, 국토교통부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을 계속 거주하게 한 경우에는 적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있어 분양전환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는 점, 넷째, 법원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 사유가 존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임대의 무기간이 경과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다섯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임대주택의 입주 지정기간에 정상적으로 입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섯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가 가능한 하자와 입주가 불가능한 하자에 대한 구분 기준이 없는 점. 일곱째, 2017년부터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해 온 신청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을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인정했다.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해지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신청인은 이사 후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문의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전입신고 후 2주 이내에 주소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던 신청인은 전입신고 후 주소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전처럼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피신청인 수도과장은 주소변동 정보가 수도요금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종료를 인정한 분들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생신고를 양주시로 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감면요금은 세대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이고,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신청인이 양주시와 같은 관내로 전입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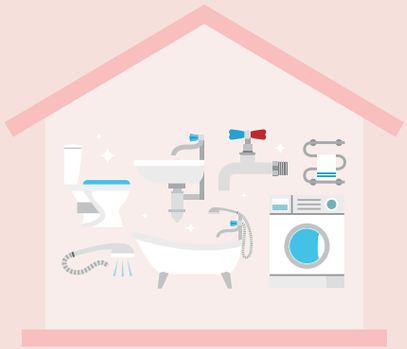
둘째, 신청인의 배우자가 감면대상자인 아들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했으므로 출생 후 36개월 동안 당연히 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

셋째,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즉시 신고하며, 미신고 시 이후 감면 혜택을 중지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중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

넷째, 전입신고 시 주소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점.

다섯째, 신청인의 사정과 같은 이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권익구제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관내에서 주소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해지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에게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했다.



장애인과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이제 주차 걱정은 넣어두세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및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5월 15일 국민신문고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개선 요구에 주차표지증 발급 개선을 권고하며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 범위(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개선 요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다중시설 및 공용주택, 도로 등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부모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하고, 도로·여객시설에는 장애인전용 표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주차장 이용에 혼선이 야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개선

- 요즘 젊은 장애인 부부 중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살면서 도움받는 분들이 많은데, 보호자 주차표지증 발급이 안 되어 일반주차장 이용으로 불편하니 개선 요구('22.9.30. 제안)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이의

- 주차면 중앙에만 장애인 전용그림 표시로 차량주차 시 위반 여부 확인이 어려워 불법주차에도 과태료 미부과한 지자체 처분이 황당하니 시설개선 등 확실한 조치 요구('22.1.3. 민원)

■ 장애인 주차증 사용 관련 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현재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표지증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만 발급이 가능하다.

현행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민법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닌 형제자매 배우자와 그 자녀는 포함되는 등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장애인과 동거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차표지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로 "장애인 중에는 배우자의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배우자의 부모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니 법령을 개정해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국민제안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29일 시행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장애인과 '주소를 함께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대했지만 구체적인 보호자 범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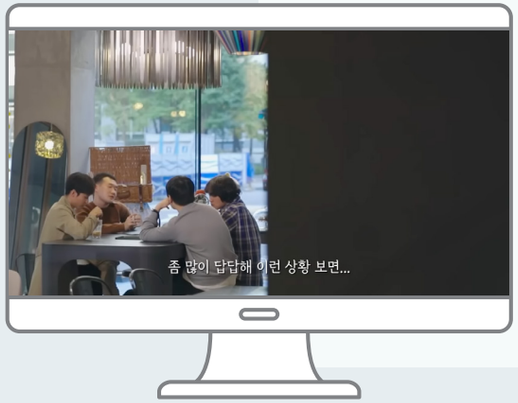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5월 15일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 범위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시설임에도 설치 기준이 달라 국민 혼선을 야기했던 도로·여객시설의 경우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Hot 영상 추천 3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은
부패 방지, 고충처리, 제도 개선, 행정심판 같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여름호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영상 세 편을 소개한다.



MZ세대가 바라는 채용

사회 초년생이 면접장에서 마주한 채용 비리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채용 문화를 지적하면서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링크주소
https://youtu.be/T_LJ-oZlk1U

권익리뷰 투토커 '면접 편'

투토커가 면접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일상 속 채용 비리와 공정 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링크주소
https://youtu.be/roiyXe56dRA

스승의 날, 즐겁게 기념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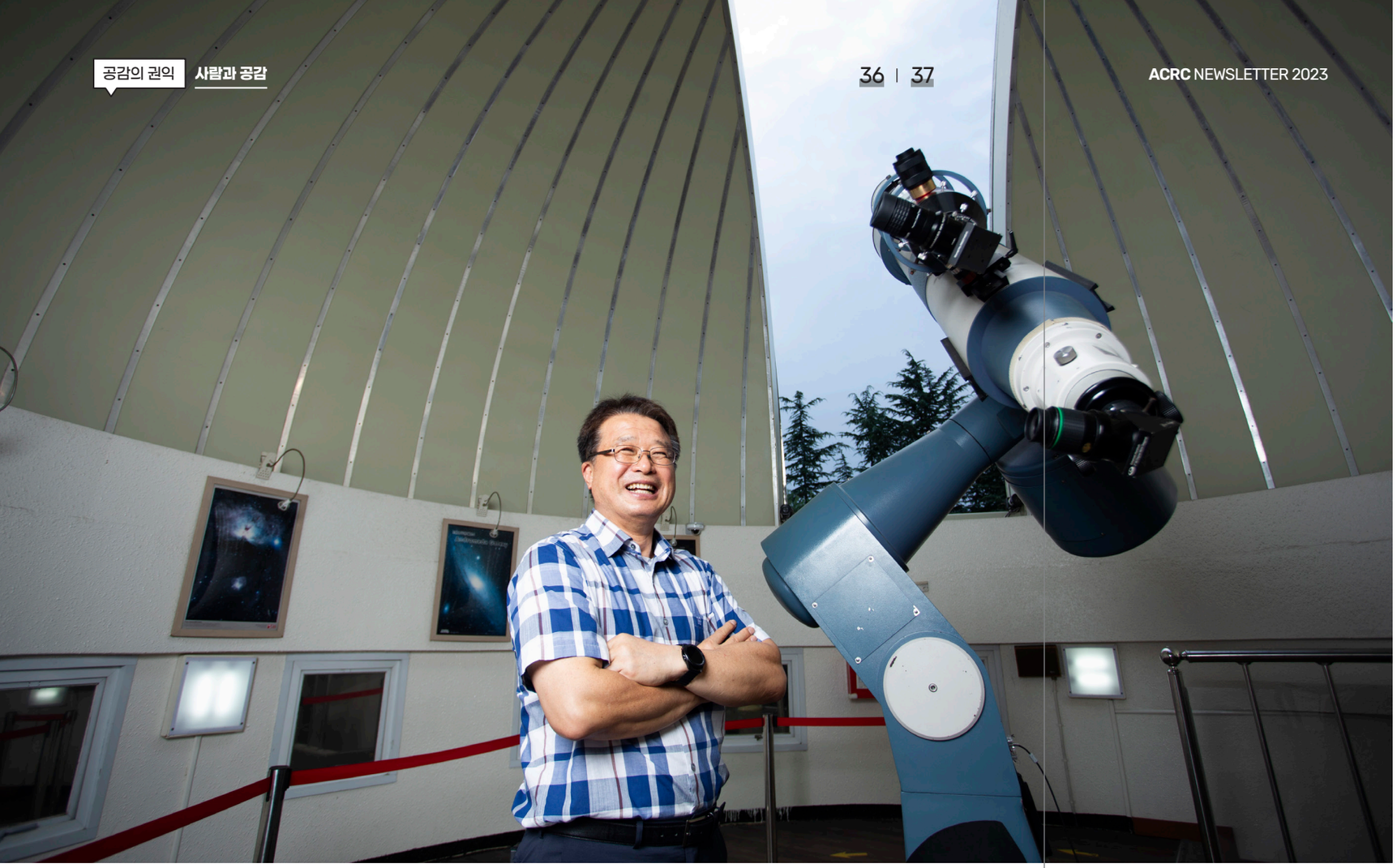
스승의 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바탕으로 궁금했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링크주소
https://youtu.be/BqF4PwW6UVg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예약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 취소

그림. **디자인에스**



별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있는
대전시민천문대 최형빈 대장

대전시민천문대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는다. 2001년 5월 3일 개관한 국내 천문우주과학관 1호이면서 국내 유일무이한 과학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천문대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대전시민천문대를 15년 동안 맡아온 최형빈 대장이 전하는 대전시민천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이나리** 사진. **이용기**

천문대에서 열리는 별 음악회

1991년 시작된 '별 부스러기' 동호회 활동부터 시작해 1996년 야심 차게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천문대를 거쳐 2008년 대전시민천문대를 맡게 된 천문학 전문가 최형빈 대장. "제가 2008년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고정관념을 깨자'였어요. 천문대 하면 대부분 과학교육기관으로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양로원을 방문해 달과 별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천문의, 천문에 의한, 천문을 위한 사명감으로 가득 찬 최형빈 대장은 막연하게 천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길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그런 그의 열정과 노력 덕분인지 대전시민천문대는 코로나 이전에는 12만 명, 코로나 이후에도 5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프로그램은 별 음악회다. 햇수로 22년간 열린 별 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천체투영관에서 진행되며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바로 옆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천문 우주 과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문화 예술과 함께 어우러지니 색다른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별 음악회는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도,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별 음악회 연주자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무대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 음악회는 내년까지 연주자가 정해져 있을 만큼 문화, 공연 업계에서는 인지도와 인기가 높다. 최형빈 대장은 그동안 별 음악회 무대에 올랐던 학생들 중에 유명 음악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하며 본인의 일처럼 즐거워했다.

별과 사람이 있는 대전시민천문대

최형빈 대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2014년 10월 개기월식과 함께했던 별 축제와 2016년 8월 12일 페르세우스 유성우 행사를 꼽았다.

"대전시민천문대는 동일 시간에 최대 관람 인원이 180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 별 축제에서는 2일 동안 1만 6천여 명이 참여해 천문현상을 관람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는 비법에 대해 그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전통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가지에 몰두해 진득하게 연구하는 걸 즐기는 성향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방식이다.

"1,500회가 되면 기네스북에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별 음악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던 최형빈 대장은 7월 넷째 주 토요일 기준 1,358회째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별 음악회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0~70대 위주의 관람객들이 즐겨 찾는 시 낭송회부터 우주의 신비로운 장면을 포착한 사진전이 열리는 아스트로 갤러리, 해외 공연과 세계 어린이 합창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의 어린이 합창단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을 위한 천문 우주와 관련된 직업 체험과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체험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시민관측회',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 운영' 등 천문대 밖에서 이뤄지는 행사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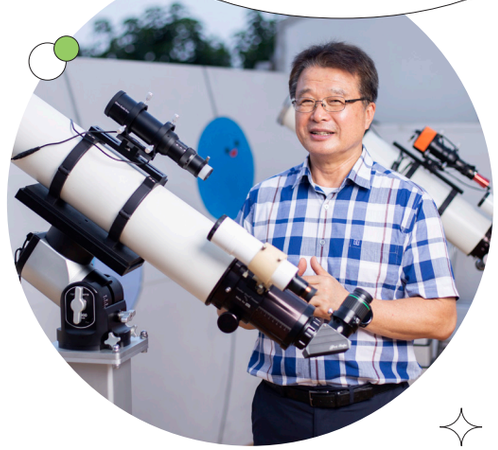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전시민천문대는 카페 '별이 가득한 하늘 놀이터'를 만들어 2009년 2월부터 양로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또 2009년부터 보육 시설(혜생원)과 장애인 시설(행복마을)에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김장 봉사를 시작해 혜생원, 행복마을, 그리고 9개 장애인 시설에 김치를 배달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민천문대는 '우주강국'이라는 수식어에 맞춰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최형빈 대장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밤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들을 여유롭게 관측할 수 있는 체류형 천문우주과학관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커피에도 일가견이 있어 카페를 운영하며 각종 기관에 커피 강의까지 다니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합니다."

최형빈 대장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문화 예술과 천문 교육을 함께 접할 수 있는 '하늘 놀이터'로, 젊은이들에게는 별을 앞에 두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건전한 데이트 코스로, 어르신들에게는 별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힐링 장소로, 그리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천문대로, 사람들의 삶 속에 빛나는 별처럼 희망을 전해주는 장소로 기억되고자 한다. 올여름 가까운 도심 속에 별빛과 음악이 흐르는 대전시민천문대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늙을 시간이 없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 그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삼합보다 맛있는 야경 맛집

한여름밤의 여수

비단 노래의 인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수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난 것은 이미 오래됐다. 특히 뜨거운 한여름 돌산대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해산물 삼합은 여수를 더욱 들뜨게 만든다. 버스킹 공연과 유람선에서 터지는 불꽃놀이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낭만을 선사하는, 볼거리 먹을 거리로 가득한 여수의 여름밤

글. **나덕한** 사진. **이용기**

낭만에 취하기 좋은 낭만포차거리

KTX 여수엑스포역에서 5분 정도를 달리면 여수종포해양공원에 다다른다. 이곳에서부터 100m 가량의 거리에는 '낭만포차'라 불리는 18개의 포장마차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이른바 낭만포차거리. 일반 어촌마을과 다를 바 없었던 이곳에 2016년 낭만포차거리가 조성되고 숙박시설이 들어선 데다가 노래 '여수 밤바다'가 더해져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특히 SNS에는 여수에 다녀온 이들이 앞다투어 업로드한 사진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게 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빗장 풀린 여행객의 심리까지 더해져 더욱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선호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낭만포차의 시그니처 메뉴는 돌문어, 묵은지, 삼겹살이 주연으로 나서고 대하, 전복, 새송이버섯이 조연으로 출연하며 감칠맛을 더한 여수 삼합. 여기에 좋은 인연과 함께 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음식에 매료되고 여수 밤바다에 취하고 만다.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여름휴가를 맞아 낭만버스킹이 열려 관광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샛노란 일몰과 유람선에서 펼쳐지는 선상 불꽃놀이, 그리고 음악까지 어우러져 마치 축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에 그 여운은 계속된다.

여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

여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은 돌산공원이다. 여수 밤바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지만 특히 해상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멋진 야경을 그 어떤 미사여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바라보는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경은 여수항의 밤바다와 어우러져 통영의 그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흐른다. 미항의 분위기의 통영과 달리 여수는 형형색색 조명과 바다와 섬,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주말이면 돌산대교 앞에는 유람선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크루즈가 있는데 이 장면을 한곳에서 담을 수 있는 곳이 해상케이블카다.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설치된 바다 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는 빛축제와 불꽃축제를 한 번에 관람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스릴까지 선사한다.

붉게 물든 동백의 향연, 오동도

하얀 눈꽃을 밀어내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동백은 12월에 복숭아 마냥 홍조를 띠기 시작해 3월이면 동백꽃으로 만개한다. 동백이 꽃봉오리를 터트리면 오동도도 서서히 붉게 물들어간다. 오동도의 동백은 촘촘히 군락을 이뤄 마치 숲을 방불케한다. 너무 우거진 나머지 어깨에 살며시 떨어지는 동백의 잎은 봄이 내려앉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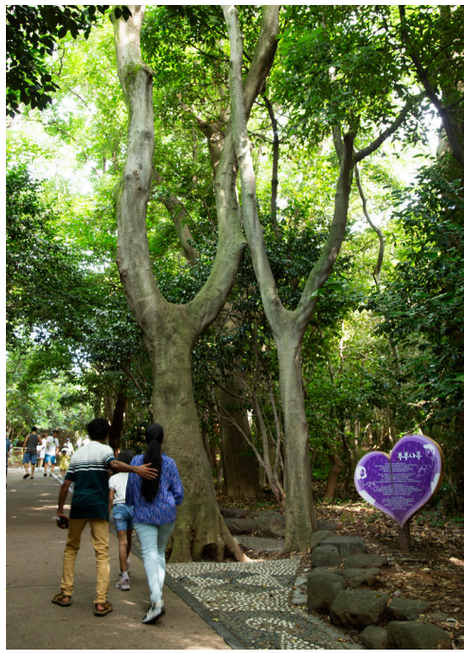
멀리서 바라보면 오동잎을 닮은 모습에 오동도라 불리게 된 이 섬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수군 연병장을 만들어 이곳의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알려져 있다.

768m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오동도는 방파제 입구에서 동백열차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방파제를 따라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10분이면 도착한다.

오동도 입구의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해안 절벽과 바위 등을 관람한 뒤에 오동도 등대 인근에서 내릴 수 있고, 모터보트를 이용하면 관광을 액티비티하게 즐길 수 있다.

섬에 들어서면 방파제 끝에서 중앙광장으로 연결된 길옆으로 오동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때부터 오동도의 백미가 시작된다. 동백나무가 화려하고 무성하게 뻗은 산책로는 마치 동굴을 만든 듯 송글송글 맺은 땀을 잠시나마 적셔준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으로 자연스레 조성된 기암절벽을 감상하기 위한 오동도의 선물이자 에피타이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 좁고 길게 뚫린 용굴과 해안절벽을 만날 수 있다. 용굴은 인생 샷을 건지기 위해 많은 인파를 뚫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경을 마주할 수 있지만 마치 한 편의 그림과도 같은 이 순간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할 수 있다. 해안절벽을 뒤로 하고 산책로 곳곳에는 하얀 등대, 음악 분수, 판옥선 모형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도 선정되었을 정도로 절경을 자랑하는 오동도에 인파가 가장 많은 시간은 일몰과 함께 그림 같은 야경이 펼쳐지는 해질녘이다.



‘제로’ 열풍, 먹거리 시장을 뒤흔들다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숫자가 있으니, 바로 ‘0’이다.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음료, 무설탕 디저트, 과당을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 소주 등이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식품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숫자, ‘0’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맛있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는 일. 소비자들의 이러한 내적 갈등을 알아챈 식품업계는 맛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섭취 시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의 함유량을 낮춘 ‘로우 스펙(Low Spec)’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열량이 없거나 극히 낮은 ‘제로 칼로리’ 식품과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제로 슈거’ 제품도 여기에 속한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제로 슈거 소주, 무가당 디저트 등 제품 전면에 ‘0’를 내세운 이른바 ‘제로 식품’들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제품군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 1월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로 슈거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가 ‘같은 맛이라면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변에서 제로 식음료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응답자도 72.6%로 매우 높았다. ‘제로 열풍’이라 불릴 만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제로 식품의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 7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중 제로 슈거 제품 비중이 2021년 22.5%, 작년 32%, 올해 3월 기준 41.3%로 꾸준히 높아졌다.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슈거 음료가 살이 덜 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량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식품 제조사들이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를 로우 스펙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이유는 분명하다. 칼로리와 당류 첨가를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단맛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체 감미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분자가 결합한 형태로 99.9%가 탄수화물이며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 성분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며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반면 대체 감미료는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으며 단맛이 설탕 대비 200~600배 높아 매우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다.

빠지기 쉬운 '제로의 함정'

제로를 내세운 로우 스펙 식품의 소비량 증가는 건강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0'이라는 숫자를 무작정 믿어서는 곤란하다. 무엇이 제로인지, 어떻게 '0'을 만들었는지, 그 안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적당히 소비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각 제품이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제로의 주인공이 서로 다르다.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과 칼로리 제로, 알코올 무첨가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제품을 홍보할 때는 하나같이 '0'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로 제품을 고르기 전에는 무엇이 제로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로를 내세웠지만 따지고 보면 '0'이 아닌 제품도 있다. 예를 들어 열량의 경우,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식품 100㎖당 4㎉ 미만일 때'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존 제품에 비해 극히 소량이긴 하지만 열량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0'으로 식품의 본질을 꼭꼭 숨기기도 한다. 무가당 소주 제품은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열량은 제로가 아니다. 소주의 주성분인 알코올의 열량은 1g당 7㎉로 당류 1g보다 3㎉가 더 높다. 때문에 제로 소주라도 열량은 밥 한 공기 열량인 300㎉를 넘나든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은 안주는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무설탕 디저트도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 칼로리가 기존 제품 대비 낮을 뿐, 열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식품 대비 높다.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오히려 식욕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인 수크랄로스가 함유된 음료를 마시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비해 식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음료 소비로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 '적당히'

그런데 최근 제로 열풍에 경종을 울린 일이 있었다. 지난 7월 13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주요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자 회견에 나선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가끔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암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절한 섭취는 괜찮다는 의견을 덧붙였지만, 아스파탐과 대체 감미료를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과연 아스파탐은 안전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WHO 산하 기관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의 분류 방식을 알아야 한다. IARC는 발암물질을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미분류 물질) 등 4개 군으로 나눈다. 하지만 이는 암에 걸릴 확률이나 상관관계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햇빛(자외선)과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은 똑같이 1군에 포함돼 있는데, 이 둘의 위험성을 동등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큰 2A군과 달리 아스파탐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다시 말해 개연성이 불확실하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군인 2B에 속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김치, 코코넛 오일 비누, 알로에 베라 등 우리가 흔히 먹고 사용하는 것들도 다수 2B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아스파탐은 적절하게만 섭취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WHO가 권장한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40mg 미만으로, 체중 60kg의 성인이 아스파탐이 43mg 함유된 다이어트 콜라를 매일 55캔 마셔야 기준을 겨우 채울 수 있다.

결국 아스파탐이든 제로 식품이든, 영양 정보를 잘 따져서 적절한 양을 먹는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제부터 '0'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과 꼼꼼함을 갖추자.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이다.

환경을 위한 지구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했고 인간환경선언을 발표, UN 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했다.

UNEP는 1987년부터 해마다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데 대륙별로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한다.

더불어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열어 환경보호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과 기관에 수여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고 1997년에는 서울에서 UNEP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1. 일회용품 줄이기
2. 장바구니 사용하기
3. 절수 제품 사용하기
4.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5. 텀블러 사용하기
6. 물건 재사용하기
7.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
8. 절전 기능 사용하기
9. 필요 없는 메일 정리하기
10. 냉·난방기 적정온도 맞추기

무더운 여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 여름 불청객 요로결석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자칫 물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다. 바로 요로결석이다. 요로결석은 비뇨기과 환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많이 증가하는 질병으로 알려진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날 적절한 수분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글 이나리

여름철 조심해야 하는 질병,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소변 안에 염분이 과포화 상태가 되거나 정상적인 결석 형성 억제제가 부족할 때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지나는 길인 요로에 어디에든 생기며 통증, 출혈, 감염 또는 소변 흐름 차단을 일으키는 단단한 덩어리다. 온도와 계절은 요로결석 발생에 중요한 요인인데, 밖을 나서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여름에는 요로결석이 생기기 쉽다.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 수분섭취의 감소이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수분섭취가 감소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결석이 형성된다. 또 햇볕에 노출될수록 비타민D의 형성이 증가하면서 요로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늦여름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다. 요로결석의 발생은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후천적인 생활습관도 연관성을 보인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가 요중 칼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2~3배 발생 위험성이 높고, 20~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고령층에서도 발생이 늘고 있다.

요로결석은 참기 힘든 통증으로도 알려져 있다. 통증은 갑작스럽게 옆구리나 갈비뼈와 고관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얼마간 지속되다 사라진 뒤에 또다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인다.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가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도 유발한다. 이처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구역, 구토, 복부팽만, 혈뇨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데다가 심한 경우에는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정보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식습관의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또 결석은 수직 운동을 통해 아주 작은 크기일 때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고 비만이라는 악화 요인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여름에 더 중요한 수분섭취

여름철 불청객인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분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소변을 희석함으로써 원인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분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물요리를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짠 음식을 많이 먹어 과다한 염분을 섭취하게 된다면 요로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위도 식히고 수분섭취도 하고자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맥주는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체내 수분량을 줄여 요로결석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생수를 통해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더 좋다.

건강한 정보

수분섭취가 많아지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어 결석 생성이 예방되고, 만들어진 결석도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소변을 볼 때 소변의 색을 확인해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측정할 수 있다. 소변의 색이 무색에 가까울수록 충분한 물을 섭취한 것이다.

식생활 개선이 필요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므로 이를 챙겨먹는 것이 좋은데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로 오렌지, 자몽, 귤, 수박 등이 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석을 서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므로 짠 음식과 수산화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양배추, 파, 부추, 딸기, 당근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를 줄여야 하지만 칼슘을 너무 섭취하지 않아도 요로결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식을 통해 적정량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한다.

건강한 정보

여름날 갈증 해소에 좋은 탄산음료는 요로결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미네랄 중 하나인 인산을 포함하고 있어 피하도록 한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콩팥에 스트레스를 주며 소변의 칼슘 수치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탄산음료의 섭취를 삼가고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건강한 여름나기에 좋은, 수분 함량 높은 수박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즐겨 찾는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을 보충해주고 체액의 손실을 줄여준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1.5배 이상 함유되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좋다. 이뿐만 아니라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A,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갈증 해소와 피로회복은 물론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수박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로, 야생으로 자라던 것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4,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서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산군실록』이나 <화훼초충도>에서도 수박의 그림을 볼 수 있고 신사임당의 그림 등에서도 수박을 발견할 수 있어 조선시대 초기 전부터 수박을 재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접해온 수박 속에는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 있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륨 또한 풍부해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수박은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조절 식단에도 적합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다.

TIP 수박 이렇게 고르자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므로 꼭지의 상태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 살짝 두드렸을 때 '통통' 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 덜 익은 수박은 '깡깡'하는 금속음, 너무 익은 수박은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

TIP 수박 이렇게 보관하자

수박을 칼로 자르기 전에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한다. 상온에 저장해놓은 수박은 냉장보관한 수박보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40%나 상승하기 때문이다. 먹다 남은 수박은 랩으로 싸두면 세균이 3,0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보관한다.

재료

잘라놓은 수박(2컵), 우유(3컵), 연유(적당량)

만드는 법

① 잘라놓은 수박(1컵)과 우유를 믹서에 간다.
②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8시간 이상 얼린다.
씨를 빼지 않았다면 체에 거른다.
③ 얼린 수박 우유를 빙수기로 곱게 갈아 그릇에 담고 수박(1컵)을 얹은 뒤 연유를 뿌린다.
빙수기가 없을 땐 방망이로 두드려 부순다.

재료

수박 100g, 페타치즈 100g,
오이1/2개(메론이나 참외로 대체 가능),
굵은 소금 1작은 술(오이 세척용), 민트잎, 화이트발사믹,
올리브유, 후추

만드는 법

① 수박, 오이, 페타치즈는 비슷한 크기로 네모나게 썬다.
② 수박과 오이를 볼에 담고 올리브유 1큰술,
화이트발사믹 1큰술, 후추를 넣고 버무린다.
③ 수박, 오이, 치즈를 번갈아 쌓아 큐브모양을 만든다.
④ 민트잎을 올리고 올리브유를 한 번 더 뿌려 마무리한다.
레몬 제스트를 뿌리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독자의 소리

2023년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지난 호를 읽고

유성원(충청북도 영동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소식을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강원도 삼척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OX 퀴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해가 발생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인식(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늘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퀴즈 | Quiz

미리보는 2023 추석 명절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OMR 퀴즈!
엽서에 OX OMR 퀴즈 정답을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20~21P 참고)

※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퀴즈 정답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

1. 류내경(경기도 파주시)
2. 박태규(인천광역시 연수구)
3. 이경은(서울특별시 강동구)
4. 이인호(경상북도 김천시)
5. 정태복(강원도 춘천시)
6. 최규석(충청북도 청주시)
7. 최병갑(전라남도 화순군)

※ 우편엽서에 연락처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유선 문의(044-200-7081)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1번	O
2번	O
3번	O
4번	X
5번	O
6번	O

풀 칠 하 는 곳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이메일

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9.3.22~9999.12.31
세종우체국
제40060호

신규 정기구독 신청 □

ACRC NEWSLETTER 2023
국민권익 Vol. 77 SUMME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권익위 열독왕 퀴즈 (OX OMR)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20~21P를 참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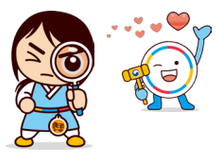
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O X)

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O X)

3. 친지 중에 공직자가 있다면, 명절 선물은 가능한가요? (O X)

4.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O X)

5.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요? (O X)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위원회 신고 접수 (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익침해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